

보도시점 2026. 8. 31.(월) 조건 배포 2026. 8. 28.(금) 16시

불법사채 200만원이 400만원이 될 뻔한 순간, 신고 한 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개선·보완 -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 추진

✓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 ▶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수사의뢰 등 피해구제 제도를 한 번에 신청 가능

✓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 모든 과정에서 신복위가 피해자 지원

-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더라도 신복위로 연계되도록 피해 진술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원스톱 지원 이용을 신청
- ▶ 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자료 열람·등사, 진행상황 확인 등 수사절차 전반을 조력하고, 피해회복 소송까지 연계

금융위원회는 8.28일(금)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하였다. '26.3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이후 현장에서 확인된 이용자 불편사항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께서는 '26.8.31일(월)부터 개선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이용하실 수 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이란? >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채무조정 등 피해회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피해자별로 지정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다음의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위법성을 고지하고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
- ②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됨)
- ③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및 법률상담 (☞ 이후 추심 연락은 채무자대리인이 상대)
- ④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및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 ⑤ 경찰 수사의뢰 (☞ 불법사금융업자 검거 후 부당이득 반환 등 피해회복 소송 연계)
- ⑥ 신복위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 상담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는 무료입니다.

I.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개선내용

①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기능 신설

☞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헛갈리지 않고 불법사금융 신고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신고 한 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별로 여러 번 신청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내역(채권자 정보, 대출 및 상환내역)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고메뉴가 제도별로 파편화되어 있어 피해구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어떤 창구를 선택하여야 하는지 모르거나, 의도한 바와 다른 제도를 신청하는 등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26.8.31일(월)부터는 기존의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메뉴를 통합*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에 신설된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더라도 한 번의 신고로 모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채권자 정보 등 피해내역을 여러 번 반복 입력해야 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

* 불법대부광고 및 전화번호·SNS 신고는 공익 제보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 메뉴로 존치

아울러, 온라인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로 신고하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전담자 배정, 채무조정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절차로 연계된다.

< 온라인 불법사금융 신고창구 개편 >

피해구제 제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신고메뉴	
	기존	개선
신고 및 수사의뢰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신청	
소송구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무료지원 신청	
전화번호 이용중지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SNS계정 이용중지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카카오톡 또는 라인 계정 신고	

②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경찰에 신고하셔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상담 예약을 도와드립니다.
-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신 확인해드립니다.
- 수사로 끝나지 않고, 이미 상환한 원리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돌려받는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경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 이용을 희망하더라도 스스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여야 지원이 개시되어 다소 번거로웠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시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지 않아 원스톱 지원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피해자도 상당수였다.

아울러,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진행상황 확인이나 자료보완은 피해자 본인이나 변호인만 할 수 있어 피해자는 경찰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오가며 같은 진술과 자료제출을 반복해야 했고, 수사 종료 후에도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해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소송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26.8.31일(월)부터는 담당 수사관이 원스톱 지원 안내문을 교부한 뒤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직접 확인한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QR코드로 신용회복위원회 앱에 접속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등사, 자료 보완, 수사 진행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 수사절차 전반을 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신원이 특정된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결과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알리지 않더라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하여 대부계약 무효확인,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까지 지원한다.

II.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방법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상담과 지원은 모두 무료이다.

① 온라인 신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참고1])

①금융감독원 온라인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하여 ②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 클릭 후 ③‘불법사금융 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나요?’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접속하면 ④「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피해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되며, 증빙자료의 경우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 불법추심 연락 녹취 또는 대화내용을 제출하시면 된다*.

* 증빙자료가 일부 없더라도 신고 가능

② 오프라인 신고(원스톱 지원 신청) : 전화 상담(☎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참고2])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로 상담을 예약한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방문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 신고까지 함께 진행한다. 특히, 지난 8.3일부터 전담센터가 전국 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되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방문하실 수 있다.

* (서울) 서울중앙·관악·광진·노원 / (경기·인천) 인천·고양·의정부·수원·성남·안산 / (강원) 원주 / (충청) 대전·청주·천안 / (호남) 광주·전주 / (영남) 대구·부산·사상·창원·울산 / (제주) 제주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가 방대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정리를 도와드리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신 경우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된다. 미리 피해내역이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경우 상담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증빙자료는 문자·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SNS계정 등 온라인 신고와 동일하다.

Ⅲ.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운영현황

시행 이후 약 6달간 **821명**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받았으며, 그 중 **656명**의 피해자가 **4,705건**을 신고하였다. 전국 22개 권역에 배치된 31명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신고서 작성,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신청, 수사의뢰 등 일련의 절차를 피해자 곁에서 밀착 지원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23일~8.21일)>

상담(명)	접수(명) (불법채무(건))	신복위 경고조치(건)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건)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건)	무효확인서 발급(건)	수사의뢰(명)	계좌정지 조치의뢰(건)	복합지원(명)	
								채무 조정	금융·고용· 복지 연계
821	656 (4,705)	3,421	148	1,566	154	895*	105**	81	42

*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채무자 기준 171건)

** 금감원 접수건 포함 총 278건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다수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 제외)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3,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사금융 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종결을 요구하여 불법추심을 중단시켰으며, 그중 **645건**에 대해서는 채무종결에 합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또한, **123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을 연계하여 일상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을 신속히 조치하였다. 피해자가 불사금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54건**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사금업자 **895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사례 >

■ [사례 1] 청소년 10대 A군

- 미성년자 A군은 친구의 권유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사금업자에게 불법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총 2건, 35만원을 차입함. 대출조건은 20만원 차입 후 1주일 뒤 40만원 상환, 15만원 차입 후 1주일 뒤 30만원 상환하는 것으로 연 이자율은 약 5,214% 수준으로 확인. 이후 상환이 어려워 연체되자 불사금업자의 요청으로 연장비 8만원을 입금함. 하지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사금업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A씨 친구들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의 사진 및 차용증 등을 문자 등으로 유포해 피해가 확대되었고, 이를 알게 된 부모(관계인)가 '26.8.13일 신복위를 방문하여 원스톱 피해지원 서비스를 신청
- 전담자는 상담 당일 불사금업자 2명을 대상으로 채무종결 및 초과수취금 반환 요구 등 초동조치 실시. 다만, 채무종결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즉시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금감원에 이관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2건), 무효확인서 발급(2건), 계좌 지급정지(1건) 조치 의뢰

■ [사례 2] 40대 A씨

- 이혼 후 중학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여성 A씨는, 실직과 사업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 현재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아 생활하고 있으나, 수급비만으로는 자녀 교육비와 주거·생활비 등 매월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이에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광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하게 되었으며, '26년 7월부터 총 5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을 이용함.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200만원이었으나 계약상 상환해야 할 금액은 총 400만원이었고, 연 이자율은 약 3,500% 수준으로 확인.** A씨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약 150만원을 상환함.
- 그러나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생계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지속적인 추심**으로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6.8.1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을 신청함.
- 전담자는 피해자의 대출거래 및 상환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추가적인 불법추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5건)** 및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5건),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3건)**을 신청함. 아울러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제도권 금융회사 카드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적용 가능한 채무감면 등 지원 여부를 검토중임. 또한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법추심 과정에서 누적된 심리적 불안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마음돌봄 상담을 연계**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에 그치지 않고 채무부담 완화와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지원함.

IV. 향후 계획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로 방문하여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를 배정받아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가 작성·제출한 신고내용을 전담자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창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운영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피해 예방 권고문)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장代	오유정	(02-2100-2610)
		담당자	사무관	김상록	(02-2100-2513)
담당 부서 <공동>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책임자	총 경	김현수	(02-3150-2037)
		담당자	경 정	진우경	(02-3150-2168)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임정환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민혁진	(02-3145-8277)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부 금융피해자지원팀	책임자	부 장	강효정	(02-750-1201)
		담당자	팀 장	서동백	(02-75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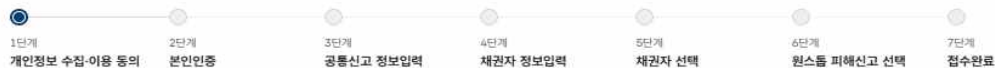
참고 1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온라인)

-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속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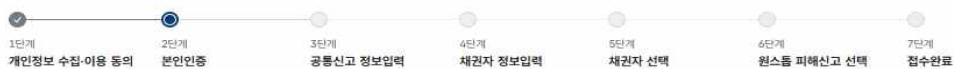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2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같은 법의 위반 사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의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본인인증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인원 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 신청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므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본인인증 기관을 통해 인증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사용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 또는 금융기관 등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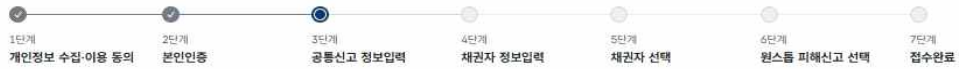
별도로 은행같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전자서명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휴대폰 본인인증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간편한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기

④ 공통 신고 정보(신고인 정보) 입력



공통 신고 정보

☑ 모든 입력 항목은 필수입니다.

신고구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출 피해 신고 /제보
- ☐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제보
- ☐ 그 밖의 사금융 피해상담

신고인 유형

- ☐ 피해자(채무자 본인)
- ☐ 피해자(채무자의 관계인)
- ☐ 기타

⑤ 채권자(채권추심자) 관련 피해내용 입력

※ 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채권자 정보 추가를 통해 기재 가능



채권자 정보입력

☑ 별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채권자 1(협의업체)

① 채권자 2인이상인 다중채무자의 경우 아래 [채권자 추가] 버튼을 눌러 채권자 정보를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성명 / 업체명* (필수)

⑥ 피해신고 대상 채권자 선택

※ 채권자별 제도 신청 후 다시 돌아와서 다른 채권자 신고 가능



채권자 선택

조치대상 채권자 선택

- 채권자별 신청 가능합니다.

① 등록 이후 채권자 선택으로 돌아와 이전 선택된 채권자를 제외한 채권자 선택 가능합니다.

성명 / 업체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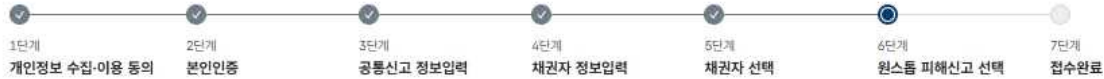
A

☒

B

⑦ 신고를 원하는 제도 선택 후 추가 정보 입력

※ 제도에 대한 설명이 궁금한 경우 「제도설명」 클릭



원스톱 피해신고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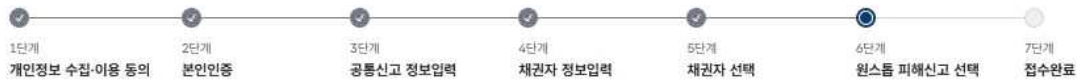
☑ 신청을 원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제도를 선택하세요 (복수선택)

제도설명

-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지원 신청
- ☒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서 발급 지원 신청
- ☐ 불법대부계약 관련 소송구조 지원 신청
- ☒ 불법대부행위 등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
- ☐ 불법대부행위 등에 대한 메신저(SNS) 이용중지 신청
- ☐ 불법대부행위 등에 대한 게시물 삭제 신청
- ☒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제보-신고(수사의뢰)

⑧ 접수완료

※ 다른 채권자 신고: 채권자 선택 돌아가기



채권자 []에 대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통합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채권자 추가 신고는 "채권자 선택 돌아가기" 신고 종료는 "접수완료"를 선택 바랍니다.

< 채권자 선택 돌아가기

접수완료 >

참고 2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접수방법(오프라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각 센터에 전화로 상담 후 내방하면 된다. 해당 센터 위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

지부	주소	연락처
서울중앙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02-750-1281
관악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6(봉천동 853-1), 호산빌딩 9층	02-6337-0814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21 5층	02-3436-6480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3층	02-3392-4534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무실동 1718-4) 씨티타워 2층	033-765-1806
인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032-864-9465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장항동 890-7) 흥국생명빌딩 6층	031-902-4851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의정부동 141-3) 한화생명빌딩 4층	031-844-9702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031-307-6269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수내동 6-5) 예미지빌딩 2층	031-606-8055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고잔동 541-2) 남양빌딩 6층	031-482-5368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042-538-0206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81번길 4(북문로 1가 9-3) 미래에셋증권빌딩 4층	043-224-9525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신부동 467-5) 삼성생명빌딩 11층	041-522-1498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062-233-1876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396 세광빌딩 3층	063-255-5946
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8층	053-428-9380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051-866-0037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괘법동 558-2) 송원센터빌딩 10층	051-317-4254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이수빌딩 3층	055-292-4304
울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삼산동옥산빌딩 2층 전체 (201호,202호)	052-260-9221
제주	제주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064-902-3257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제도 안내문



불법사금융 종합·전담 지원 제도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담자가 배정되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회,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전담자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불법사금융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도와드립니다.



전담자 상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상담 신청
 (방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 콜센터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